

2019 업무계획



01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강화

02

국민의 미디어 접근권
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

03

방송통신시장의
공정 경쟁 환경 조성

04

한류 방송 콘텐츠
제작·유통 기반 확충

05

표현의 자유 신장 및
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방송의 역할 재정립

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

-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
- 사장 선임에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



수신료 감면제도 개선

- 체납 가산금 인하(5→3%)
- 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 절차 간소화
- 선납 할인제도 고지 의무화



방송의 공정성·공익성 제고

엄격한 재허가 심사

- 공정성 확보 등 재허가 조건
이행 점검 철저
- 재허가(승인)제도 개선
- 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 기간,
조건 부과, 이행 점검 주기 등 차별화



공정성 평가 강화

- 방송심의 규정 위반, 오보 관련
확정판결 등 방송평가시
확대 반영



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



신속한 재난방송 구현

-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을
위해 진입부 비상방송 실시
- TV 자막방송 전달망 다원화



방송광고의 사회적 책임 강화

- 공익광고 편성 확대 추진
-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



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

- 방송언어 실태 조사
- 허위·과장 등 중점 모니터링
- 관계자 교육 및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
자율규제 강화

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

미디어교육 강화

- 미디어교육 확대
25만 28만 31만
'18년 '19년 '20년
- 정보취약계층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
-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지원



미디어센터 확대

-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구축
(경기, 충북, 세종)
- 미디어나눔버스 확대운영
(2대→4대)



시청자 참여 및 소외계층 접근권 확대

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

- 마을미디어교육 확대
50개 70개 80개
'18년 '19년 '20년
-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협의회 운영
-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



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향상

-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(1만5천대)
69.7% 80% 90% (저소득층 보급률)
'18년 '19년 '20년
- 장애인방송 (자막, 수어·화면해설) 제작지원 (46억원)
-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



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

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

-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
- AI·데이터 활용에서의
이용자 권리 및 보호원칙 선포
- AI·데이터 윤리 혁신센터 설립 추진



초연결 시대 통신재난 대응 개선

- 통신재난 시 이용자
행동요령 매뉴얼 마련
- 통신사업자 장애 발생 시
이용자 고지 의무화 및 배상책임 강화



이용자 피해구제 실질화

-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
-통신분쟁 처리기한 90일→60일
- 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보호
방안 마련·고지 의무화 추진



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

-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
가입 의무화
-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 도입
-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
-허가→등록



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



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시행

- 합리적 수익배분 유도
- 계약절차 공정성 제고



불공정행위 점검강화

- 인터넷 플랫폼·단말기유통·
- 홈쇼핑·방송광고 분야의
- 부당거래 행위 등 중점 점검



ICT생태계 공정경쟁 기반구축

-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운영
- 불공정행위 법제정비

외주제작 상생유도

- 외주제작비 현실화
→ 재허가조건 이행점검
- 제작현장 안전 강화
→ 방송평가 반영



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



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

- 망이용 불공정행위 규정(법 개정)
- 공정한 망이용 계약
가이드라인 마련



개인정보분야 규제집행력 강화

-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
- 국가간 공조 및 협력 채널 강화



불법서비스 규제 강화

- 해외사업자 불법서비스
임시중지 제도 도입
-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확대
(18년 앱마켓사업자+19년 SNS사업자)

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

종편PP 규제 합리화

-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 제외
- 외주 편성 의무 확대



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해소

-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
자료제출 의무 부과



제작자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

방송광고·협찬 제도 개선

- 방송광고 제도 개선으로
시장 활성화
- 협찬의 정의·기준 명확화 등
법적 근거 마련



방송광고 판매 제도 개선

- 미디어렙 허가 기간 조정
(5년 → 3~5년)
- 판매영역 확대 추진
(방송광고 →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등)



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

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확대

- 신남방·신북방 국가와
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
- 국내외 사업자 간 매칭
기회 제공을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



국내방송사 해외진출 지원

-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
- 글로벌 워킹 그룹 발족·운영



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

OTT 서비스 제도화

- 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 지원
- 방송·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지원



지상파 UHD 정책 재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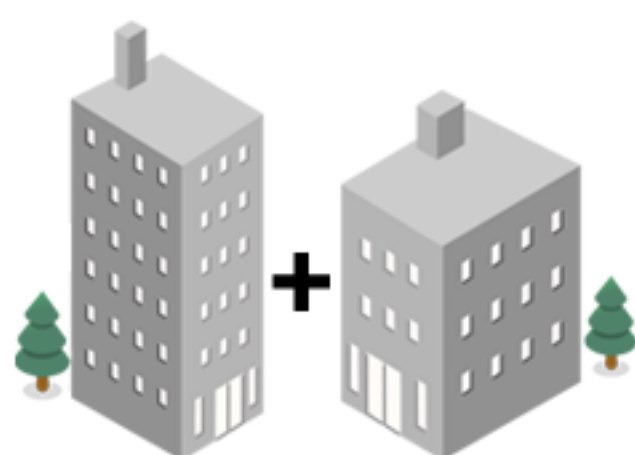
- UHD 추진 점검 TF 운영
- UHD 전환 시기 및 편성비율
현실화 방안 등을 재허가에 반영



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

기업간 인수·합병시 공공성 확보

- 기업간 M&A 시 공공성·지역성
보장 및 콘텐츠 투자 유도
-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시
시장 획정 재검토



데이터 개방 확대

- 방송프로그램에 대한
인터넷 반응 분석·공개
- 스팸데이터 (학계·통신사 연구·대응)
- 전국 와이파이 AP DB (긴급구조 활용)



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

임시조치 제도 개선

-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추진
- 온라인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



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

- 공익을 위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



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클린인터넷 환경 조성

- 불법유해정보주요공급망통신심의강화
- 심의절차개선(24시간 이내 심의)
- 불법도박·음란물·저작권침해엄정대응



웹하드 카르텔 근절

- 웹하드·필터링 업체간 주식·지분 소유 금지
- 필터링 업체 등록요건 강화
- 해쉬기반 → 해쉬+DNA 필터링 기술 적용



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지원

- 학계, 언론계, 인터넷사업자 중심 다자간 협의체 구성
- 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

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

- 청소년 보호의무/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

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

청소년 보호 강화

-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확대
- 스마트폰 과의존·사이버폭력 예방활동 강화
- 사이버안심존 확대



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

-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



- 공모전 등 참여형 캠페인 강화

